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방행정

- (한국) 새로운 지역형 평생교육정책: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
- (일본) 일본 지자체의 탈탄소 정책의 현황과 과제

지역발전

- (일본) 일본 지방의 협력적 지원 전략「간사이 광역연합」
- (스페인) 바르셀로나 슈퍼블록(Superblocks) 지역발전 프로젝트



일본 지자체의 탈탄소 정책의 현황과 과제

탈탄소 정책 도입의 배경

- IPCC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.5℃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% 이상 감축,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(Carbon Netzero)의 경로를 제시
-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(COP26)에서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℃ 이내, 가능하다면 1.5℃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재확인
- 2020년 스가 일본 전 총리가 국회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. 또한, 2021년 4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%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, 50%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전하겠다고 선언
- 일본 정부는 「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」을 2021년 일부 개정: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및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
- 2000년대 이후 지자체가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: 2004년 교토시가 처음 제정한 이후로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
- 지자체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: 2021년 11 월 30일 현재 40都道府県、295市、14特別区、119町、24村이 표명, 일본 총인구의 88.3%를 차 지하고 있음

정부·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(国·地方脱炭素実現会議)

- 설립배경: 스가 전 총리가 2050년 탈탄소 중립을 선언할 때에 정부와 지자체가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표명
- 설립목적: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2050년까지 탈탄소 및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, 또한 로드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구축
- 정부·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를 2020년 12월 24일 처음으로 개최, 회의의 구성원은 내각관방 장관(의장), 환경대신과 총무대신(부의장), 4명의 대신(내각부특명담당대신(지방창생), 농림수산

대신, 경제산업대신, 국토교통대신), 6개 지역(長野県知事, 軽米町長, 横浜市長, 津南町長, 大野市長, 壱岐市長)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

- 2021년 6월에 「지역 탈탄소 로드맵」을 발표: 지방에서 시작되는 다음 세대로의 이행전략을 핵심 메세지로 선정, 지역 탈탄소는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매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창생에 공헌한다는 메세지를 포함. 특히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중심으로 지역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
- 탈탄소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자체, 지역기업, 지역시민 등 지역의 관계자들이 주역이 되어 지역 탈탄소 정책을 실시, ①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(Best Available Technology)을 이용, ②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, ③지역의 경제활성화, 재난방지 및 생활의 질향상 등 지역과제의 해결에 공헌

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대책 및 시책

- (1) 2025년까지 실행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인재·기술·정보·자금을 적극지원
 - 2030년까지 적어도 100군데의 「탈탄소선행지역」을 선정: 지자체, 지역기업, 지역의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탈탄소를 향한 선행적인 정책 및 시책을 실시. 이러한 선행지역에서의 탈탄 소정책을 통해지역과제 해결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
 - 전국적으로 중점대책을 실시: ①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의 도입, ②지역이익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입지선정, ③공공시설 및 업무용 빌딩의 철저한 에너지 절약, 재생에너지 전기조달 및 ZEB(Net Zero Energy Building) 유도, ④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, ⑤제로 카본 드라이브(Zero Carbon Drive), ⑥자원순환의 고도화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, ②탈탄소형 지역육성, ⑧식량 등 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
- (2) 기반적 시책: 정부 부처의 탈탄소 관련 시책의 중점화, ①지역의 탈탄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메커니즘 구축, ②시민이 자발적으로 탈탄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촉진, ③사회전체가 탈탄소를 향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촉진
- (3) 지역과 생활에 있어서 탈탄소와 관련된 개별 분야별 대책 및 촉진시책: 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, ②주택 및 건축물, ③지역개발, 교통, 관광, ④지역경제 및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, ⑤순환 경제로의 이행, ⑥지역생활 및 순환경제를 지탱하는 인프라, ⑦자연의 힘을 활용한 탈탄소화

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 제정

- 2000년대 이후 도시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를 제정
 - 초기에는 생활환경 관련 조례에 지구온난화 내용이 포함됨(2002년 북해도 삿포르시 생활환 경 확보에 관한 조례, 2002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등)
 -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(2004년 교토시 지구온난화 조례, 2007년 치바 현 카시와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등)
 -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사업실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(동경도 미나토구 지구온 난화등 대책기금 조례 등)
 -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조례(나가노현 이이다시 재생에너지 도입에 의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등)
- 일본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는 중앙정부의 온난화 관련 법률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 적인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음. 최근에는 적응에 관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고 규제대상도 소규모 사업자로 학대하고 있음

현황 및 시사점

-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및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지역의 탈탄소 정책은 효과적이 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
- 정부 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, 예산 및 인재가 부족 한 지자체에서는 탈탄소 정책 시행의 중요한 인센티브
- 탈탄소 정책을 위한 로드맵의 설정 및 관련 정책 및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평가하지 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탈탄소 정책의 전체적인 평가는 시기상조
-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의 경우를 봐도 교토시, 요코하마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지만, 아직도 대부분의 지지체, 특히 인구감소가 현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온난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탄소중립선언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
- 탈탄소 정책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, 지역 에너지 자립도의 증가, 에너지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중요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탈탄소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사례가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

참고문헌

- ・ 釼持麻衣. (2021). 「都市自治体による温暖化対策条例の最新動向」 『都市とガバナンスVol.35』、
 135-147.
- 環境省. (2021).「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2050年二酸化炭素排出実質ゼロ表明の状況」 (https://www.env.go.jp/policy/zerocarbon.html, 2021년 12월 2일 열람).
- 内閣府. (2021). 「脱炭素に向けた地方自治体の取組ついて」
 (https://www.cas.go.jp/jp/seisaku/datsutanso/hearing_dai4/siryou2.pdf, 2021년 12월 2일 열람).

나성인 통신원

(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) nasungin@shudo-u.ac.jp